

광주 동남갑 유력후보들 잇따라 발목...선거판 '요동'

정종제, '민간공원 특례 수사' 불출마·최영호,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



정종제 최영호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유력 후보군들이 검경 수사 등으로 잇달아 발목이 잡히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광주 동남갑은 3선의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버트는 곳이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동남갑은 민주당에서만 입지자가 9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예초 민주당 동남갑지역위원장인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덕 전 청와대 행정관,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 등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임형진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 정재수 전 광주도시철도공사 본부장, 정진욱 희망과살림정치경제연구소

장 등도 자천타천 출마예정자로 거론됐다.

인지도나 지지도면에서는 최 전 구청장이 앞서고 정 부시장은 다크호스, 윤 전 행정관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근무경력 등으로 떠오르는 신성, 이 상임감사는 복병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유력 후보군으로 평가되던 정 부시장과 최 전 구청장이 잇따라 악재를 만나 판세가 복잡해졌다.

정 부시장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10월1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2단계 특검감사로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따르는 과정에서 정 부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감사위원장, 시 전 생태환경국장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정 부시장을 아직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중인 경우 명예퇴직이 제한될 수 있어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크호스로 떠오르던 정 부시장이 검찰 수사 등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히던 최 전 구청장은 '금품 수수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최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이던 2015년 무렵 광주 남구 주월동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 A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 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구청장은 사실 무근에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전 구청장은 "금품수수와 인허가 특혜 의혹은 경찰조사에서 조차 관련자들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허위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의 수사기간이나 진술의 신빙성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쯤 경찰이 브로커 A씨와 관련한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하던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최 전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한 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따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브로커 A씨는 수십억원의 횡령 금액을 맞추기 위해 '누구누구에게 얼마 건넸다'는 식으로 짜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브로커 A씨는 '골프장에서 2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가 구체적인 장소를 물으면 라커룸에 돈을 놓고 왔고 최 전 구청장과 눈을 마주쳤다'고 한다"며 "식당에서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한 부분도 사람 많은데 어떻게 전달했다고 물으면 '가방 옆에 두고 왔다'고 하는 등 말이 오락가락한다"고 말했다.

유력 주자였던 정 부시장과 최 전 구청장이 잇따라 불출마하거나 경선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동남갑 판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양상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박지원, 흑석동 집 판다는 김의겸에 "누가 돌 던지랴...존경한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어"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1일 흑석동 집 매각 및 차액 기부를 선언한 김의겸 전 대변인에 "존경한다"며 박수를 보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제가 아는 김 전 대변인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저도 김의

겸답지 않게 흑석동 집 문제가 보도될 때 비난했지만 그는 변명을 하면서도 정리, 이익의 차액은 기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누가 김의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면서 "역시 김의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잘못을 고치는 김의겸 전 기자, 전 대변인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장하다.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삭발·단식 이은 필리버스터 한국당, 잇단 '초강수' 득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법) 통과를 막기 위해 삭발·단식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회의 상정예정인 198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며 투쟁수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회 소집하면 임시회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 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필리버스터를 꺼낸 든 것을 두고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에 대

강경투쟁 일변도에 지지층 결집...민생·중도층확장 외면
"지지연으려면 발상 전환해야" vs "신독재 무조건 막아야"

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상정된 법안처리를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투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란 초강수를 꺼내든 건 황 대표의 단식 중단 이후 정기국회 회기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당 인팍에서의 리더십 우려가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이들이 대외 강경투쟁을 통해 당내입지를 다지고 내년 4·15 총선을 대비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과 관련 수세에 몰릴 때마다 유리한 국면으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삭발, 단식 등 초강수로 맞서왔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분회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민식이법' 등에 대한 처리 무산을 두고 '네 탓 책임공방'을 벌여지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지는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해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화상 국회의장"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교통사고로 지식을 잃은 부모들 앞

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한국당이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려면 '집토끼' 결집에 그쳐선 안되며 중도층·무당층 등 '산토끼' 지지세까지 끌어안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2·27 전당대회 이후 황 대표는 오랫동안 내용을 겪던 당 내부를 빠르게 장악하며 입지를 굳혔지만, 20~30%대 '콘크리트 보수층'에서 더 확장하지 못하며 대외 투쟁 또한 흐지부지된 바 있다.

또 황 대표의 삭발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하고 황 대표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철회, 공수처법·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했지만, 여론 및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법안 198개 중 '민식이법', '소상공인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포함되면서 여론이 싸늘해지는 형국이다. 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다시 등장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장외투쟁, 단식, 삭발에 필리버스터까지 강경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선거제법과 공수처법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협상에 임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일정 양보를 얻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한국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당내 주류를 이루는 강경파 의원들이 가진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들이 선거제법과 공수처법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한국당 입장에서 선거제법도 문제지만 공수처법은 새로운 '신독재'로 문을 활짝 여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공수처 실상을 잘 모르고 좋은 것처럼 얘기되고 있으니 필리버스터를 통해 알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